일본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

ㅇ 아베 총리는 '17.4월에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율 인상을 '19.10월로 30개월 재연기하겠다고 발표

ㅇ 이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공약 위반에 대한 '정치적 책임'에 대해 '16.7.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은 후 추진할 예정

ㅇ 아베 총리 기자회견 포인트
- 세계경제는 큰 리스크에 직면 : 리스크에 대비 모든 정책을 총동원
- 소비세율 10% 인상은 2019년 10월로 연기 : 2020년 재정건전화 목표는 견지
- 「공약 위반」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
- 참의원 선거에서 「국민의 신임」을 물음 : 여당 과반 이상 의석 확보

1 소비세율 인상 연기 발표

ㅇ 아베 총리는 '16.6.1일 기자회견에서 '17.4월로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율 인상을 '19.10월로 다시 연기하겠다고 발표

- '14.4월 소비세율을 5%에서 8%로 인상할 때 8%에서 10%로 인상시킬 시기를 '15.10월로 예정하고 있었으나, '14.11월에 인상 시기를 '17.4월로 연기했으며 이번에 다시 연기한 것임
  - 아소 부총리 겸 재무대신은 재연기에 반대했었지만 "여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리가 결정하고 따른다."고 언급

ㅇ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 이유에 대해 아베 총리는 "신흥국이나 개도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세계경제가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"고 외부 요인 탓으로 설명

- 디플레이션 탈출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'소비절벽'에 부딪힐 것이 우려되기 때문

2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대한 반응

○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에 대한 계획은 '16.5.26일에 개최된 'G7정상회담'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으며, 야당은 "소비세율 인상 재연기는 공약 위반이고 아베노믹스의 실패"라고 주장하면서 '16.5.31일 아베 내각 해산을 요구하는「불신임결의안」을 제출

-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"아베노믹스로 인해 고용이나 소득이 개선되었다"고 반박, 불신임안은 중의원에서 부결처리 됨

○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

①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

- "일본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소비도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번 재연기 결정을 존중하고 싶다"고 아베 총리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입장

· 아베노믹스로 기업의 수익은 증가했지만,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개인소비가 활발하지 않는 상황

② 이사카 세븐&아이HD 사장

- "국내소비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증세하면 소비가 더욱 줄어들 것"이라고 코멘트

③ 니시야마 히타치제작소 회장

- 연장으로 사업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 "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증세는 필요하지만 실시 시기에 대해는 경기 동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것"이라고 언급

④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

-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재연기는 "유감스럽다"고 언급, "다음에도 인상하지 못하면 일본은 재정적으로 파탄될 것"이라며 '19.10월에는 반드시 인상하도록 아베 총리에게 요구

○ 월스트리트저널(WSJ) 등 해외 언론들은 디플레이션 탈출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아베노믹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으며, 소비세율 재연기로 재정 개건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논평

3 소비세율 인상 연기로 인한 영향

○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사토 야스히로 회장은 “아베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 결정은 일본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촉발할 것”이라고 지적

- 소비세율 증세 연기는 “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는 동시에, 아베노믹스가 정부 재정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것”이라며 “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”고 우려

-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(S&P)는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가 일본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

- 니혼게이자이신문은 “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모든 입장이 같은 것은 아니다”라며 소비세율 인상 연기가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

○ 자민당, 공명당, 민주당 3당이 ‘12년에 합의한「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」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사회보장 충실을 위한 시책이나 국채로 보충했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제시

- 소비세율 인상이 다시 연기될 경우 연간 약 4.4조 엔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어서, ‘17년도 사회보장정책에 약 2조 8000억 엔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
  · 연간 예산규모 : 육아 정책 약 1000억 엔, 연금 약 6000억 엔, 간병 약 1400억 엔

- 아베 총리는 “적자 국채를 재원으로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정책은 어려울 것을 이해해 달라”며 사회보장 정책의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
  · 아베 총리는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보육 서비스의 확대, 간병 부담 해소 등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
  · ‘16.5.31일에 예정되어 있던 일본재흥전략2016의 각의결정을 연기, 소비세율 인상 관련 부분을 수정할 것으로 보임

○ 아베 정권이 '15년 말에 입안한 「'16년도 세제개정대강」에서 '17.4월 소비세율 인상 시 자동차취득세를 폐지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장될 것으로 예상

- 주택론 잔고에 따라 연간 최대 50만 엔의 소득세가 공제되는 주택론 감세와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에 주택구입자금을 원조한 경우의 증여세 비과세조치는 기한이 '19.6월이지만 소비세율 인상 후까지 연장될 전망

○ "아베노믹스가 실패했기 때문에 소비세율 인상을 연장했다" 또는 "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"는 비판이 커질 경우 '16.7.10일 실시될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상존

○ '14.11월에 소비세율 인상을 처음 연장했을 때 일본국채의 등급이 하락했으므로 이번에도 하락될 가능성이 상존

- 일본국채가 2등급으로 하락될 경우 일본의 은행이나 기업의 사채 등급도 하락하게 되어 일본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

- 일본국채시장이 흔들리면 한국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

4 향후 대책 및 전망

○ 아베 총리는 '16년 가을, 임시국회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'16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

- 지금은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최대한 가동시켜 일본경제 회복에 주력할 때라면서 가을에 「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대책」을 강구할 방침

-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'19.10월부터 소비세율을 인상을 명기한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

○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연장하였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기초 재정수지(Primary Balance)*의 '20년도 흑자화 목표는 유지하겠다고 주장

· 기초 재정수지 : 정부의 세수·세외수입 – 세출(국채 등 이자비용 제외)

- 그러나 소비세율 증세가 실시되더라도 약 6.5조 엔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 달성은 어려움

○ 아베 총리의 자민당 대표로서의 임기는 '18.9월까지이기 때문에 소비세율 인상 시기인 '19.10월에는 다른 정권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

- '18년 말부터 연속해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, '19년 가을부터는 '20년 도쿄올림픽의 특수(特需)가 시작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이전에 소비세율 인상을 실시하는 것을 피한 것임. KJCF

< 향후 정치 일정 >

'16.7.10.	참의원 선거
'16년 여름~가을	내각개편 및 임시국회
'18.9월	아베 자민당 대표 2기 6년 임기만료
'18.12월	중의원의원 임기만료
'19년 봄	통일지방선거
'19년 여름	참의원 선거
'19.10월	소비세율 인상 예정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6.6.1), 산케이신문(2016.6.1), 아사히신문(2016.4.14, 5.30), 마이니치신문(2016.6.1), 요미우리신문(2016.5.31, 6.2), 시사통신(2016.6.1), 닛케이비즈니스온라인(2016.6.2)